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1/17 통권 1658호

2024년 시행 개정 조세법률 신규조문 대비표

• 목 차

▶ 2024년 개정세법 내용 중 기업경영영향 중요 항목 엄선	p.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p.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p.9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p.1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p.29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p.35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p.42

•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 p. 14

AnSe, Creates the Best Answer

eAnSe.com

의 30분 내 Q&A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2024년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

-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 신설(부가법 §8)
-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명확화(부가법 §10)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부가법 §46)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부가법 §60)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부가법 §70)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14)
- 배당소득 총액화 가산율과 배당세액공제율 11%에서 10%로 내림(소득법 §17③ 개정)
- 2024년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소득법 §59)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년 연기함(소득법 §81)
-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 추가(상증법 §42)
-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상증법 §48)
- 혼인증여공제 1억원 또는 자녀출산증여공제 1억원 적용(상증법 §53의2 신설)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상증법 §71)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국기법 §26)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국기법 §28)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국기법 §49)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국기법 §54)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현행	개정
<p>● 제5조 【신탁소득】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p> <p>1. ~ 4.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④ (생략)</p> <p>● 제9조 【납세지】 ① ~ ③ (생략)</p> <p>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p>	<p>● 제5조 【신탁소득】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 제9조 【납세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98조의6 또는 제98조의8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 대통령령으로 정</p>

현행	개정
<p>한다.</p> <p>● 제18조【평가이의 등의 익금불산입】(생략)</p> <p>1. ~ 7. (생략)</p> <p>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생략)</p> <p>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생략)</p>	<p>하는 장소로 한다.</p> <p>● 제18조【평가이의 등의 익금불산입】(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u></p> <p>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p> <p>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p> <p>●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p> <p>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p> <p>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① (생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생략)</p> <p>③ ~ ⑤ (생략)</p> <p>●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① ~ ④ (생략)</p> <p>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조를 준용한다.</p> <p>⑥ ~ ⑨ (생략)</p> <p>● 제68조【주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p>	<p>●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 공제】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2조를 준용한다.</p> <p>⑥ ~ ⑨ (현행과 같음)</p> <p>● 제68조【주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4조</p>

현행	개정
<p>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p> <p>2. (생략)</p> <p>④ ~ ⑦ (생략)</p> <p>●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① (생략)</p> <p>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생략)</p> <p>●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p> <p>●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 제75조의1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① (현행과 같음)</p> <p>② 배당을 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에 ………. 다만, 배당을 받은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그 동업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위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위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들을 말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을 정산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정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배분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연결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 지급</p> <p>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합하여진 경우</p>



현행	개정
<p>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 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p> <p>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p> <p>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p> <p>●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④ (생략)</p> <p>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⑦ (생략)</p> <p>●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법인(……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나.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 이 있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을 제1항의 기한까지 해당 연결자법인에 지급</p> <p>가. 연결자법인의 해당 연결사업연도 결손금이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 합하여진 경우</p> <p>나. 연결자법인의 제76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된 경우</p> <p>● 제9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⑦ (현행과 같음)</p> <p>● 제98조의5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 받는 법인(……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98조의6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신설>	
<p>● 제98조의8【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①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9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의 기한 및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8조의4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8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와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실질귀속자가" 및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는 각각 "외국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가"로 본다.</p>
<p>● 제113조【구분경리】① ~ ④ (생략)</p> <p>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1. 2. (생략)</p> <p>⑥ ~ ⑧ (생략)</p>	<p>● 제113조【구분경리】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2. (현행과 같음)</p> <p>⑥ ~ ⑧ (현행과 같음)</p>
<p>●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75조의14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p>	



현행	개정
<p>제5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연결법인별 배분금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9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p> <p>제7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5항 본문, 제98조의5제2항 본문 및 제98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p> <p>제8조 【외국인 통합계좌와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9조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 【연결자법인 변경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결자법인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7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8조제9항)

사업자등록의 직권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와 사실상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의 위임규정을 신설함.

나. 비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연장(안 제42조제1항)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

숙박업·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마.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안 제60조제1항)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안 제60조제4항)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사.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안 제7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
<p>● 제8조【사업자등록】① ~ ⑧ (생략)</p> <p>⑨ (생략)</p> <p>1. 폐업한 경우</p> <p>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p> <p>⑩ ~ ⑫ (생략)</p> <p>●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p> <p>1. ~ 3. (생략)</p> <p>② ~ ⑩ (생략)</p> <p>● 제29조【과세표준】① ~ ⑦ (생략)</p> <p>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p>	<p>● 제8조【사업자등록】① ~ ⑧ (현행과 같음)</p> <p>⑨ (현행과 같음)</p> <p>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p> <p>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⑩ ~ ⑫ (현행과 같음)</p> <p>●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⑩ (현행과 같음)</p> <p>● 제29조【과세표준】①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p>

현행	개정
<p>⑨ ~ ⑫ (생략)</p> <p>●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거래처별로 <u>1역월(1曆月)</u>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p> <p>2. 거래처별로 <u>1역월</u>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p> <p>3. (생략)</p> <p>●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u>부당한 방법</u>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p> <p>다. (생략)</p> <p>3. (생략)</p> <p>③ ~ ⑦ (생략)</p> <p>●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u>1역년(歷年)</u>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②·③ (생략)</p> <p>●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익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p>⑨ ~ ⑫ (현행과 같음)</p> <p>●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거래처별로 <u>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u>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p> <p>2. 거래처별로 <u>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u>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p> <p>3. (현행과 같음)</p> <p>●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u>부정한 행위</u>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p> <p>다.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u>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u>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익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구분		유효	구분		유효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 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1.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 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③ (생략)			②·③ (생략)		
●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생략) 1. · 2. (생략)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및 제53조의2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			●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현행	개정
<p>역 또는 권리(이하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p> <p>1.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2.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u>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u>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p> <p>⑤ ~ ⑩ (생략)</p> <p>●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② · ③ (생략)</p> <p>●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60조 【가산세】 ①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 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u>납세지 관할</u>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p> <p>⑤ ~ ⑩ (현행과 같음)</p> <p>●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u>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u>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p>

현행	개정
<p><신설></p>	<p>을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부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간편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국외사업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간이과세의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월 5일 (금)	1월 8일 (월)	1월 9일 (화)	1월 10일 (수)	1월 11일 (목)
미 달 러 (USD)	1310.20	1313.70	1314.80	1312.10	1320.10
일 본 엔 (JPY)	905.68	907.47	912.14	908.94	906.60
영 국 파 운 드 (GBP)	1662.12	1670.11	1675.91	1667.55	1682.07
캐 나 다 달 러 (CAD)	981.20	982.90	984.76	979.76	986.70
홍 콩 달 러 (HKD)	167.78	168.17	168.42	167.87	168.82
위 안 화 (CNH)	182.94	183.00	183.47	182.96	183.83
유 로 화 (EUR)	1434.28	1437.19	1439.84	1434.32	1448.55
호 주 달 러 (AUD)	878.69	881.76	883.28	876.88	884.47
싱 가 폴 달 러 (SGD)	985.45	987.93	990.13	985.84	991.2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2.71	282.27	282.69	282.57	284.41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마목·며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



- 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제6항)
-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 바.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 상향(안 제59조의4제8항)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안 제81조의11 등)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안 제156조의9 신설)
-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현행	개정
<p>●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의 범위】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p>	<p>●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의 범위】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p>
<p>●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4. (생략)</p> <p>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p> <p>② (생략)</p>	<p>●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156조,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 및 제156조의9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략)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바. (생략)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u>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라. (생략)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u>육아휴직수당</u> 바. ~ 러. (생략)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u>10만원</u> 이내의 금액) 버. · 서. (생략) 어. (생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u>사용자등</u>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단서 신설> 2) (생략) 저. (생략) (생략)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다. (생략)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 	<p>●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u>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u>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u> 바. ~ 러. (현행과 같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u>20만원</u> 이내의 금액) 버. · 서. (현행과 같음) 어. (현행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u>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u> 2) (현행과 같음) 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다. (생략)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



현행	개정
<p>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단서 신설></p> <p>마. ~ 사. (생략)</p> <p>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1) ~ 3) (생략)</p> <p>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u>10만원</u> 이내의 금액</p> <p>5) (생략)</p> <p>자. (생략)</p> <p>●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 8. (생략)</p> <p>9. (생략)</p> <p>가. 나. (생략)</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천200만원</u>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p> <p>④ ~ ⑥ (생략)</p> <p>● 제17조 【배당소득】 ①·② (생략)</p> <p>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u>100분의 11</u>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1. ~ 4. (생략)</p> <p>④ ~ ⑥ (생략)</p> <p>●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p>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u>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u></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p>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u>20만원</u> 이내의 금액</p> <p>5) (현행과 같음)</p> <p>자. (현행과 같음)</p> <p>●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현행과 같음)</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u>1천500만원</u>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17조 【배당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u>100분의 10</u>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p>

현행	개정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p> <p>다·라. (생략)</p> <p>3.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 (생략)</p> <p>●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 ~ ④ (생략)</p> <p>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p> <p>다·라.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p> <p>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52조【특별소득공제】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p>



현행	개정
<p>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생략)</p> <p>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p> <p>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 1천800만원</p> <p>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1천500만원</p> <p>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300만원</p> <p>⑦ 삭제</p> <p>⑧ ~ ⑪ (생략)</p> <p>●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생략)</p> <p>2. 2명인 경우 : 연 30만원</p> <p>3.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p> <p>②~ ④ (생략)</p> <p>●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가. (생략)</p>	<p>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p> <p>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 2천만원</p> <p>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1천800만원</p> <p>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 600만원</p> <p>⑦ 삭제</p> <p>⑧ ~ ⑪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2명인 경우 : 연 35만원</p> <p>3.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p> <p>②~ ④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u><신설></u></p> <p>나. ~ 라. (생략)</p> <p>3. 4. (생략)</p> <p>③ ~ ⑦ (생략)</p> <p>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p> <p>⑨ ~ ⑪ (생략)</p> <p>●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 ③ (생략)</p> <p>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생략)</p> <p>●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p> <p>2. (생략)</p> <p>④~ ⑥ (생략)</p> <p>● 제86조【소액 부징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p>	<p>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사람</p> <p>다. ~ 마.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p> <p>3. 4. (현행과 같음)</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p> <p>⑨ ~ ⑪ (현행과 같음)</p> <p>●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현행과 같음)</p> <p>●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제128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p> <p>2. (현행과 같음)</p> <p>④~ ⑥ (현행과 같음)</p> <p>● 제86조【소액 부징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p>



현행	개정
<p>2. ~ 4. (생략)</p> <p>●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u>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u>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p> <p>8. ~ 10. (생략)</p> <p>●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p> <p>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p>	<p>경우</p> <p>2. ~ 4. (현행과 같음)</p> <p>●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u>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u>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p> <p>8. ~ 10. (현행과 같음)</p> <p>●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p> <p>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p> <p>1. 양도차익 :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p> <p>2. 양도소득금액 :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p> <p>3.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p> <p>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p> <p>1. 양도소득 산출세액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p> <p>2. 양도소득 결정세액 :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p> <p>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p>

현행	개정
<p>●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생략)</p> <p>●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p> <p>표 1·표 2 (생략)</p> <p>③·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p> <p>표 1·표 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p> <p>1. 보유기간별 공제율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p> </div> <p>2. 거주기간별 공제율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제2항 표 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p> </div>



현행	개정
<p><u><신설></u></p> <p>⑤ (생략)</p> <p>●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p> <p>② ~ ⑤ (생략)</p> <p>●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① (생략)</p>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p>	<p>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p> <p>⑦ (현행 제5항과 같음)</p> <p>●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 제114조의2【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p> <p>② 제1항은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p> <p>●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① (현행과 같음)</p>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14조에 따라 양</p>

현행	개정
<p>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p> <p>1. ~ 4. (생략)</p> <p>●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3조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3조,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생략)</p> <p>●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 ~ ④ (생략)</p> <p>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 · ⑦ (생략)</p> <p>●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생략)</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p>	<p>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의 ……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 제117조【양도소득세의 환급】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기간별로 제116조제2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제9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p> <p>●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 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의4【특정지역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자(그 대리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p>



현행	개정
<p>에 따른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에 따른 제1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⑥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156조의9【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①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투자자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결제하기 위해 자기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은 비거주자는 조</p>	
<p>●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①·② (생략)</p> <p>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신설>	
<p>● 제164조의5【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p>	
<p>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제1호의 자에게 제2호의 사유가</p>	

현행	개정
<p>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3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해당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p> <p>가. 거주자</p> <p>나. 비거주자[제2호가목의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주식기준보상(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p> <p>2. 임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p>	<p>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행사한 경우</p> <p>나. 가목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을 지급받은 경우</p> <p>3. 임원등의 인적사항과 주식매수선택권등의 부여·행사 또는 지급 내역 등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p> <p>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제1항제3호의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1.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 2026년 1월 1일</p> <p>2.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 : 2024년 7월 1일</p> <p>3.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p> <p>제2조(비과세 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p> <p>② 제12조제3호마목, 같은 호 어목1)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③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출산·보육과 관련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자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5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제5조(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액 부정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제156조의4제2항 본문 및 제156조의6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국외 주식매수선택권 등 거래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식기준보상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탁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배당가산을 인하여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의 경우 :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이자 상환액의 경우 :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 제1114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 추가(안 제42조의3제1항제3호)

"재산 취득 후 재산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 현행 제48조제11항제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미달하는 금액의 20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다. 혼인·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안 제53조의2 신설)

- 1) 현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있는 바,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2)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기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안 제71조제2항제2호)

기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업승계를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현행	개정
<p>●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1. · 2. (생략)</p> <p>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p>	<p>●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p>
<p>●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p>	<p>●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p>
<p>●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생략)</p> <p>1. · 2. (생략)</p> <p>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p> <p>② · ③ (생략)</p>	<p>●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억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p> <p>1.~4. (생략)</p> <p>② · ③ (생략)</p>	<p>● 제45조의5【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억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p> <p>1.~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생략)</p> <p>② (생략)</p> <p>1.~6. (생략)</p> <p>7. <u>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8. (생략)</p> <p>③~⑩ (생략)</p> <p>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u>같은 조 제2항에 따라</u>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⑫~⑭ (생략)</p> <p>●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①~④ (생략)</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u>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6. (현행과 같음)</p> <p>7. <u>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p> <p style="text-align: center;">1)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일 것</p> <p style="text-align: center;">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나.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p> <p>8. (현행과 같음)</p> <p>③~⑩ (현행과 같음)</p> <p>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u>이 조 제1항에 따라</u>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u>제2항에 따라</u>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3. (현행과 같음)</p> <p>⑫~⑭ (현행과 같음)</p> <p>●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①~④ (생략)</p> <p>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후단 삭제></p>



현행	개정
<p><u><신 설></u></p> <p>⑥ (생략)</p> <p>●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p> <p>3. 4. (생략)</p>	<p>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p> <p>3. 4. (생략)</p>
<p><u><신 설></u></p> <p>●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 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p>

현행	개정
<p>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p> <p>④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p> <p>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p>	<p>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p>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p>●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생략)</p> <p>1.~3. (생략)</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p> <p>② (생략)</p> <p>● 제71조 【연부연납】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증여세의 경우 :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p> <p>③~⑤ (생략)</p> <p>● 제78조 【가산세 등】 ①·② 삭제</p> <p>③~⑧ (생략)</p>	<p>●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71조 【연부연납】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증여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 에 따른 기간</p> <p>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 부터 15년</p> <p>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 연부연납 허가일 부터 5년</p> <p>③~⑤ (현행과 같음)</p> <p>● 제78조 【가산세 등】 ①·② 삭제</p> <p>③~⑧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p> <p>1.~3. (생략) ⑩~⑮ (생략)</p>	<p>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조 제9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p> <p>1.~3. (현행과 같음) ⑩~⑮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제6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글로벌최저한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퍼센트)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해당 기업그룹의 모기업 소재지국 등에서 그 차이에 대한 추가세액을 과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안 제26조의2제6항제7호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함.

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안 제28조제1항제4호)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다.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 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그 국세 체납 금액을 한도로 현재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를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우선 징수가 가능한 범위는 현재 보유자 체납 국세의 전부가 아니라 그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라.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안 제49조제1항제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지금까지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마.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 확대(안 제59조의2제1항)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 외에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일정 금액 이하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1조의13제2항)

현행	개정
<p>●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적기간】① ~ ⑤ (생략)</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⑦ ~ ⑨ (생략)</p>	<p>●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적기간】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p> <p>1. ~ 3. (생략)</p> <p>4. 압류</p> <p>② ~ ④ (생략)</p>	<p>●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p>	<p>● 제35조【국세의 우선】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p>

현행	개정
<p>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u>절차</u>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p> <p>가. ~ 다. (생략)</p> <p>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u>절차</u>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p> <p>4.·5. (생략)</p> <p>② ~ ⑥ (생략)</p> <p>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u>절차</u>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p> <p>가. (생략)</p> <p>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u>제53조</u>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p> <p>다.·라.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u>절차</u>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u>절차</u>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u>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u>를 우선하여 징수한다.</p> <p>4.·5.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u>절차</u>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u>제53조</u>, <u>제53조의2</u>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p> <p>다.·라. (현행과 같음)</p> <p>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부정행</p>



현행	개정
<p>2.·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⑤ 삭제</p> <p>⑥·⑦ (생략)</p> <p>●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④ ~ ⑨ (생략)</p> <p>●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p> <p>3. ~ 5. (생략)</p>	<p><u>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u></p> <p>2.·3. (현행과 같음)</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p> <p>⑤ 삭제</p> <p>⑥·⑦ (현행과 같음)</p> <p>●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p> <p>④ ~ ⑨ (현행과 같음)</p> <p>● 제49조【가산세 한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현행과 같음)</p> <p>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는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가산세 중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p> <p>3.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② (생략)</p> <p>●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1. 이의신청인들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2. 이의신청인들이 법인이 아닐 것</p> <p>3.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67조【조세심판원】 ① ~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⑤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p> <p>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p> <p>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⑦ ~ ⑨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 제59조의2【국선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1. 이의신청인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가. 개인인 경우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나. 법인인 경우 : 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p> <p style="text-align: right;"><삭제></p> <p>3.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 제67조【조세심판원】 ① ~ ④ (생략)</p> <p>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p> <p>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p> <p>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p> <p>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세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p> <p>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p>



현행	개정
<p>● 제78조【결정 절차】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p> <p>④ ~ ⑥ (생략)</p> <p>● 제81조의13【비밀유지】① (생략)</p> <p>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p> <p>③ ~ ⑥ (생략)</p> <p>●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단서 신설></p> <p>3.·4. (생략)</p> <p>④ (생략)</p> <p>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2. (생략)</p> <p>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p> <p>⑥ ~ ⑨ (생략)</p>	<p>● 제78조【결정 절차】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제81조의13【비밀유지】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생략)</p> <p>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3.·4. (생략)</p> <p>④ (생략)</p> <p>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2. (생략)</p> <p>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p> <p>가.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p> <p>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p>

현행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p>〈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의3제4항제1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4조 【가산세 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5조 【국선대리인의 신청 자격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비상임조세심판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고, 그 밖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제7조 【조세심판관의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 철회 또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p>제8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 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안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도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안 제36조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계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의 자동정보교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금융거래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의 범위를 조정함.

* 자동정보교환(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조세행정공조협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따라 계약당사국과의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교환

다.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안 제51조의2 신설)

우리나라와 계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당사국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 확대(안 제54조제1호 및 제2호)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의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임

을 명확히 함.

- 마.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안 제58조제3항 및 제91조제4항 신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1억원 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
<p>●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생략)</p> <p>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p> <p>1. ~ 3. (생략)</p> <p>③ ~ ⑧ (생략)</p>	<p>● 제16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략)</p> <p>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p>	<p>●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p>
<p>●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 ② (생략)</p> <p>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④ · ⑤ (생략)</p> <p>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p>	<p>● 제36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 요구받은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계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p>



현행	개정
<p>하고 계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⑦ 금융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u>금융회사등의</u>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계약상대국이 ……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보유할 수 있다.</p> <p>⑧ 제6항에 따라 <u>금융정보를</u>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u>금융정보를</u> 확인하려는 <u>금융회사등의</u>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⑨ <u>금융회사등의</u>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u>금융정보를</u>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p> <p>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제공, 제8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p>	<p>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그 밖에 금융거래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거래회사등(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⑦ 금융거래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등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u>금융거래회사등의</u>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계약상대국이 ……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보유할 수 있다.</p> <p>⑧ 제6항에 따라 <u>금융정보등을</u>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u>금융정보등을</u> 확인하려는 <u>금융거래회사등의</u>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⑨ <u>금융거래회사등의</u>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u>금융정보등을</u>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p> <p>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3항·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제공, 제8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제38조 【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p>

현행	개정
<p>1.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u>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관련된 자</u></p> <p>2. (생략)</p> <p>② <u>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u></p> <p>③ 제36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를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p>●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조세 및 금융정보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3. (생략)</p>	<p>1.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과 관련된 자</p> <p>2. (현행과 같음)</p> <p>② <u>금융회사등 또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u></p> <p>③ 제36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은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외의 ……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알게 된 사람에게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3항과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되거나 누설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p>● 제41조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 같은 조 제3항·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교환 등 조세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현행과 같음)</p>
<신설>	
<p>● 제51조의2 【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1. 상호합의절차의 원활한 이행에 관한 사항</p> <p>2. 우리나라와 계약상대국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우리나라와 계약상대국 간의 조세조약 이행과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p>
<p>●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 제5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현행	개정
<p>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p> <p>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p> <p>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3. ~ 5. (생략)</p> <p>●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p> <p>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p> <p>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p> <p>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나.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p> <p>3. ~ 5. (현행과 같음)</p> <p>● 제58조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①·② (생략)</p> <p>③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 해외신탁 설정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각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p>

현행	개정
<p><u><신 설></u></p> <p>③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u>해외직접투자명세서·해외부동산등명세</u>(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p> <p>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u><신 설></u></p>	<p><u>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u></p> <p>2. 제1호의 해외신탁을 제외한 해외신탁의 경우: <u>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u></p> <p>④ 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p> <p>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u>해외직접투자명세서·해외부동산등명세·해외신탁명세</u>(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p> <p>⑥ 제5항 본문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⑦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⑧ 제3항을 적용할 때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u>해외신탁재산이 있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따르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u></p> <p>1. 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가</p> <p>가. 해외신탁이 유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p> <p>나. 해외신탁이 종료된 경우: 해외신탁 종료일 현재의 시가</p> <p>2. 제3항제2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현재의</p>



현행	개정
<p>●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p> <p>1.·2.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시가</p> <p>●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p> <p>②·③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1. 제58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9조제1항 및 제91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p> <p>제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해외신탁명세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설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하는 해외신탁에 대하여 해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② 제5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적용한다.</p> <p>제5조【국제거래 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